

북괴 공산주의 정치이념의 변천과정과
전략동향에 관한 분석검토



1969. 11

一. 북한에서 실천된 맑스·레닌주의의 이식과정과 토착화 변질 과정

I. 북한에서 실천된 맑스·레닌주의의 최저강령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

1.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위장용어인 「인민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1:2 차 세계대전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안티 태재인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강화를 동반했다.

맑스주의의 씨앗은 그 이론대로라면 선진유럽제국에서 받아·성장·번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앵글로·색슨의 토양에는 끝내 뿌리를 박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맑스주의는 「제2 인터내셔널」의 와해와 함께 서구의 정치무대에서 탈락·붕괴의 위기에 직면케 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7년, 전쟁을 내란과 혁명으로 전환·지도한 레닌의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의 성공과,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전설로, 빈사상태에서 소생한 맑스주의는 맑스·레닌·스탈린주의로 계승·변질되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적 연속상태에 있던 후진제국에 해방과 독립과 혁명의 복음으로 수출·전파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민테른」의장이던 지노비예프가 「맑스·레닌주의는 농업이 지배적인 후진국가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전·선동하여 폭력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다」라고 한 것도 이와 같

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이라 하겠다.

1차대전 이후 소련이라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이차 「혁명기지」를 갖게 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2차대전후에는 동구라파와 아시아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 혹은 신민주주의를 내세운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형태가 창출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정권들은 소련군이 진주점령한 지역에서 그들의 적극적인 간섭과 지도와 후원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하에 파시스트분자들의 철저한 숙청, 농민과의 동맹, 산업부르조아지와 소부르조아지를 광범하게 포함한 민족적·민주전선적인 인민정권, 제정당 「연합정권」의 형식을 띠고 발족하였다고 말해진다.

이렇게 하여 수립된 「인민공화국」은 비록 그 국가형태와 권력구조면에서는 「소비에트 공화국」과 상이한 점이 있으나 정치원리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 선 한 평론가도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2차대전후 소련점령군에 의해 지지된 공산당은 산업, 교통·통신기관의 사용을 독점함으로써 타당을 압도하고 또 단일입후보제에 의한 선거제나 쿠데타(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등 모든 수단에 의하여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실현시켰다.

인민민주주의는 소련의 일당독재와는 달리 다수당독재라고 하지만 이를테면 사회민주당은 공산당과의 합당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은

공산당에의 흡수가 강제됐고 다른 소부르조아 정당도 과도적으로 존재가 허락된데 불과하다.

소련에서도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특수형태라고 공언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와 산민주주의를 제창한 동구와 중공의 지배자들은 한결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충실한 신봉자와 실천자로 자처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헝가리의 스탈린주의자이던 라코시는 「인민민주주의란 소련군의 승리에 입각하면서 노동계급의 지도하에 근로인민이 소련군의 원조에 의하여 수립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국가이다.

인민민주주의란 소비에트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고 발한 바 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는 「소비에트 정부와 인민민주주의 정부와는 하나의 같은 정치제도의 두가지 형태이다. 두개가 다 같이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중공의 유소기는 1956년 중국공산당 제8회전국대회에서 인민민주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후 인민민주주의독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임무를 지니게 됐다. 그것은 즉 부르조아적, 소생산자적인 생산수단의 사유체는 사회주의적인 공유제로 바꾸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체도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권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독재임에 다름이 없다.]

북괴에서도 1954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개정, 당강령 대용품으로 써 온 당규약 제1장 「당」 항목중에서 「조선노동당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히 함으로써……」라고 하였다가 1961년 9월의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이를 수정하였다.

김일성은 「총결」(總結)보고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말했으며 당규약을 고쳐 규약중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한 문귀를 전부 「사회주의」로 바꾸었던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철두철미한 당파적 진영이론이며 동시에 그것은 혁명의 전략 전술이자 그 무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투적이고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며 시드니 후크의 말처럼 진리와 모호함과 허위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이론과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드려서는 안된다. 그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따르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 주장하기도 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인민전선의 토대 위에 선 민주주의라 하여 그럴사한 용어를 쓴 것이다.

그리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여기에는 자주성과 자발성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맑스·레닌주의를 국정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소비에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패턴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소비에트 체제의 변형이요 복사판이며 전형과 원판은 어디까지나 소비에트 체제인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란 맑스·레닌주의를 신봉 실천하는 공산당의 최고강령이고 그 최고강령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인 것이니,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는 부르조아·데모크라시혁명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가면서 급속히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삼고 이를 실행하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과 본질을 가진 인민민주주의는 외형적인 가식이야 어찌됐든 간에 프롤레타리아트독재를 카무플라즈하는 허울 좋은 의장용어라 하겠다.

2. 소련군정과 「민주기지」노선

8·15 해방 이후 북한에서 실천된 인민민주주의는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제4시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국공산주의운동은 1)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으로써 러시아 산생 불셰비키정권과 제휴한 시기.

2) 맑스주의 사상단체들의 씨름활동시기.

3) 프롤레타리아 전위대의 조직운동시기.

4) 해방후 북한에다 공산주의제도를 건설해 온 시기의 4시기를 거쳐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제4기에 속하는 이 시기는 동시에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 확립과 북한의 소비에트화의 제1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동구라파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수입·이식되었고, 소련군정하에서 성장·발전되었던

것이다.

반파쇼전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활발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티토의 유고슬라비아와 호자의 알바니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소련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 헌병과 경찰의 야만적인 탄압정책으로 민족주의 세력은 무력·탈락·쇠잔해 버렸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조직은 지리멸렬되어버린 그런 상태하에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붉은 군대가 조선땅에 들어선 그 시간부터 북조선에서는 공산당이 조직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일본군의 투항 접수임무를 수행할 목적에서 발표했다는 연합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북위 38도 이북에 주둔한 소련군은 드디어 철저한 간섭과 치밀한 계획 밑에서 북한전역을 소비에트화·공산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도 소련군사령부는 한국인들의 위구심과 경계심을 무마·해소시키기 위해 「붉은 군대는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왔는가?」라는 제시문을 내붙였으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붉은 군대는 조선에 소비에트질서를 설정하거나 또는 조선 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자 않았읍니다.」

이와 같은 성명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하에 살아 온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만한 것이 아닐 수 없고, 소련군에 대한 호감과 신뢰감을 환기·조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다시 그들은 1945년 10월 12일에 「북조선주둔소련 25군사령관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사령관 지쓰짜코브 대장과 참모부장 벤콥스끼 중장의 공동명의로 된 이 성명서는 붉은 군대가 「조선에다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할 목적이 없음」을 재확인 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사유재산까지 보호해 줄것을 약속하였다.

이 성명서는 소련이 북한을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한 최초의 공식성명이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입장은 제국주의적 억압과 지배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의 소련에 대한 매력과 지지감을 높이기 위한 책략에서 나온 것이다.

연합국에 의해 해방된 지역에 민족자결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정부수립을 소련은 국제적으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일국사회주의」전설을 시작한 1928년 이후 그 대외적 문헌에서, 소련은 다른 나라에다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거나 소비에트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소련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며 절대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언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두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야누스와 같은 존재이며,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소련군은 앞에서 말한 그들의 생명과는 달리 치밀한 계획하의 군정을 실시했다. 김일성 정권과 소련은 북한에선 남한과는 달리 군정이 실시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8.15 직후 부터 북한에서 조성된 모든 정치정세는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네크 소장의 「정치사령부」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이를 간섭 통제했다.

공산당과 기타 정당의 조직활동 및 「5도행정국」과 각도 임시 정치위원회등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았다.

소위 「자본주의의 도위」속에 있던 소련으로서는 장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구와 북한에 소련을 종주국으로 설정 「총성된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의 소비에트화 위성국화정책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1945년 10월 「북조선 민주기지 창설」노선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점령한 북한을 분리시켜 「공산혁명기지」화 하려는 적화 침략노선을 내놓았다.

해방직후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한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자치적으로 결정됐던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인민위원회」를 수립케 했다.

이 인민위원회는 소련군정의 대행기관으로써 소련군사령부의 명령과 엄격한 감독하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위원회를 「자치기관」이내 「인민의 권력기관」이내 하여 이것이 「조선인민의 창의」의 산물처럼 변형 설정했다.

김일성은 1947년 8월 15일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북조선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일층 강화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민위원회는 어떤 외국의 정치적 간섭이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권력형태가 아니라, 해방직후 조선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가 창설한 조선의 해방이 낳은 아들이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의 의곡이다.

③ 김일성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는 철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산당 체제를 확립하고 공산기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우리 당 앞에는 붉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공산당의 영향을 확대 강화하고 북조선에 민주주의 기지를 튼튼히 축성 강화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제기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민주기지」에다 수식어 하나를 더 첨가하여 「혁명적 민주기지」라 불렀으며, 남북통일의 「결정적 단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공산주의 통일을 공약한 것이라 하겠다.

그들의 「조선노동당」규약 제1장에 「조선노동당의.....궁극적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민주기지」노선은 북한의 소련에의 예속화노선이요, 북한의 공산화정책이며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노선이라 하겠다.

3. 북한의 소비에트화의 도식

북한의 소비에트화 위성국화도 동구라파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도식에 따르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먼저 지도자의 수입, 양성과 그 지도자 중심으로 권력체제를 화

림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선택되는 지도자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어야 하고 그것도 국내파의 토착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소련에 망명하여 정치훈련을 받거나 소련시민권을 가지고 소련에 복종 충성하는 열성적인 스탈린주의자라야 했다.

2차대전이 끝나자 소련군의 뒤를 따라 이와 같은 망명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화의 사명을 더고 해방된 본국으로 돌아 갔던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도 이 부류에 속한다. 소련군 소좌로서 소련군복을 입고 귀국한 이 청년을 민족적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소련군정 당국은 그럴사한 연극을 계속 꾸렸다.

「장군」이라는 칭호와, 「민족의 영웅」, 「영명한 지도자」라는 찬사가 보내지고, 「김일성장군개선키」가 꾸며졌고 「김일성장군환영 평양시군중대회」가 개최됐다.

이러한 연극이 주효하자 소련당국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케 하였으며, 김일성은 독재권력의 기틀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작업이 끝난후는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동구나 북한은 연립정부 형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산주의자들만으로 정권을 수립할 능력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단도직입적 직선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차적 우회적방법으로 소비에트화정책을 추진시켰던 것이다. 이 연립정부노선은 레닌의 「노동동맹」, 1935년의 「인민정권」, 모택동의 「연합정부」에 나타난 공산주의자들의 권력장악과정에서의 일관된 기본 전술이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이 공산당만이 아닌 북수정당제도를 갖춘 민주주의 사회임을 선전하고, 도시의 상공업자, 중농, 기독교도,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소위 「반일민주주의」 정당의 결성을 권장 추진시켰다.

이 정책에 따라 1945년 11월 23일 조만식을 당수로 하는 「조선민주당」이 결성되었으며, 다시 1946년 2월 8일 김달현을 당수로 하는 「천도교청우당」이 결성됐다. 그리고 1946년 3월 30일 「독립동맹」 후신인 「신민당」이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여 결성되었던 것이다. 그리면서 소련군사령부는 공산당의 고급간부들이 정당들에 침투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조선민주당에는 최용건과 김책이 부당수와 서기장으로 침투했으며, 천도교청우당은 당수 김달현을 회유해버리고 말았다.

소련군정당국은 조민당을 통하여 도시 상공인들과 기독교도들을 포섭하고, 청우당으로 하여금 농민들과 천도교도들을 포섭 이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당들은 곧 공산당의 「우당」과 「위성청당」으로 전략 변질하고 만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런 정당들의 간부들은 북한의 연립적 중앙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공산당의 충성스런 도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연립은 「사이비연립」이며, 공산당의 일당독재와의 차이는 다만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부터 비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제거가 시작되었다.

비공산주의 정당안의 자주성과 덕망을 지닌 지도자들은 차례로 거세 제거되고 공산당에 아부 추종하는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그 시기와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동구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선 모두 이와 같은 도식을 따르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1946년 1월이후 감금됐던 조만식의 행방불명과 당 간부들의 대거 월남으로 비공산주의지도자의 거세는 일단락된 셈이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뒤인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창립됐다. 당명을 「공산당」 아닌 「노동당」으로 한 것은 공산당이라는 당명이 독재의 상징처럼 되어 대중들에게 혐오감과 불안 공포감을 주었기 때문이요, 소련의 주구로서 민족적 주체성과 민족적 이익을 배반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당」이라는 명칭은 「공산당」에 비해 어느정도 대중정당적 이미지와 온건 유희하고 청신한 뉴앙스를 풍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비공산주의 정당 안에서의 민족주의적 내지 비협조적 지도자들을 「반동」, 「반인민적 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추방, 숙청하여, 이들 정당이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고 나면 그때에는 전인민적 단결을 나타내는 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이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공산당통치의 의탁단체요, 둘러러에 불과함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에서는 이 통일전선이 김일성의 재의에 의해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건설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공산당을 비롯한 4개 정당과 15개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의 상설기관이 창설되었다.

약칭 「민전」이 결성된 후부터는 공산당의 독재체제는 더욱 굳어져 갔고 동전선내의 어떤 정당도 최소한의 언론자유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통일전선의 조직이 완료됐을 때 동구에서는 스탈린주의가 확립되었다. 각국의 공산당 지도자는 모두 자기 나라의 「소·스탈린」이 되었으며, 스탈린에게 충성을 거부하거나 민족주의적, 자주적 정신을 지닌 공산주의자들은 숙청당하고 말았다. 비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숙청선봉이 이제는 당내에서 불기 시작했다. 동구의 경우는 1950년까지 소비에트화가 종결되어 소련의 충실한 위성국으로 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이 기간이 훨씬 단축되어 1946년 8월중순까지는 위성국화가 사실상 끝났던 것이다.

북한의 공산화, 소비에트화는 프로그램대로 순조로히 진행됐다 하겠다.

Ⅱ. 김일성 일인 체제 확립과 종파 투쟁

1. 국내파의 숙청

북파의 정치사는 「조선노동당사」이고 조선노동당사는 곧 김일성의 정치행적사요,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사라 하겠다.

김일성의 일인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는 무수한 종파투쟁과 피의 숙청이 수반되었다.

라스키 교수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공산국가에서의 권력투쟁은 음모와 숙청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숙청은 일당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북한에 있어서의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숙청의 생태는 소련에 있어서의 그것과 흡사하다.

해방후 북한의 공산당은 대체로 소련파·국내파·연안파 3대인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3파는 처음에는 민족주의적·민주주의세력을 거세하는데 단합했고, 다음 1953년에는 소련파와 연안파가 합작하여 국내파를 숙청했다. 국내파가 제거된 후에는 소련파가 연안파를 거세했다.

그리고는 소련파 자체내에서의 숙청이 있었으며 그것이 끝난 뒤엔 다시 김일성 직계파의 숙당이 있었다.

이것은 10월 혁명후 「레닌」을 비롯한 모든 볼셰비키들이 사회혁명당이나 볼셰비키를 타도·제거하는데 합심했다가, 이들이 말살된 이후는 「스탈린」이 「지노비에프」·「카메네프」와 합작하여 우선 강적 「트로츠키」를 매장하고, 그가 제거되자 이번에는 부하린·슈코프·뭉스키를 규합하여 어제의 동지이던 지노비에프·카메

네프를 거세하고 마지막에는 부하련등을 숙청하여 일인독재를 확립한 수법과 같다. 「스탈린」의 각개적파진술은 김일성도 답습한 셈이다.

국내파란 8.15 이전 주로 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8.15를 맞아 새로운 정세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들을 말한다. 채보로 따져 보면 이 국내파(북한공산주의자들과 남보당계)는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정통파라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이 국내파 숙청을 북한공산주의자 숙청과 남보계 숙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준혁의 암살과 기타 국내파 숙청

현준혁은 인텔리 공산주의자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수령격이었다. 해방직후 박헌영과 연계를 맺고 평양에 나타나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의 책임자가 됐고, 조만석위원장 밑에서 평남인민정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으며 그 인기와 영향력은 컸다고 한다.

현의 세력확대는 김일성 일파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소련군정의 입장에서조차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장애가 되었다.

이 때문에 현은 1945년 9월 28일 조만석과 함께 로마벙크사령부에 불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김일성 일파는 현이 우익 테러에 의해 죽었다고 선전했으나 이는 김의 추종자이던 장시우일파에 의해 살해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한다.

김일성의 강적이던 현준혁의 암살·제거후에도 오기섭·정달현·주영하·이주하·김채룡·김재갑등 쟁쟁한 적수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평양에 공산당 중앙을 두자는 김일성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박헌영일파의 공산당 중앙을 받들고 있었다.

김일성이 「북조선공산당」을 설치하자 이에 반대했던 이주하는 박헌영을 찾아 남하했고, 오기섭은 공산당의 제2비서로 있다가 평남 중화군 농업협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쫓겨간 끝에 투옥당하고 말았다.

다음 주영하는 오기섭등과 친밀한 사이였으나 김에게 역이봉 당하여 오기섭을 고발하였으며 이 공로로 중앙당 부위원장이 되었다가 교토상으로 등봉됐다.

그러나 그도 주소대사로 좌천당했다가 남로당 간부의 숙청공판 때 「박헌영 혁명정부」의 부수상이 되기로 승낙했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로써 그의 정치생명은 끝나버렸다.

2) 남로당계의 숙청

박헌영이 지도한 남한의 공산당은 1946년 11월,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소위 3당 합당으로 「남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였고, 다시 1949년 6월 북노당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됐다.

박헌영일파는 월북하여 6.25 때까지는 김일성일파와 서로 제휴·협력하여 공동의 적인 남한의 민족·민주진영에 대항했다.

그러다가 6.25 패전을 계기로, 반북·불좌·암투를 그 안에 간직한 양파간의 이 일시적·포면적인 협력관계는 깨졌다. 1952년 12월, 박헌영일파인 이승엽·조일명·임화·이강국·박승원·배철

이원조·설정식이 체포·투옥되었고 박은 연금당했다.

이들은 모두 「미제국주의의 고봉간첩」이었다는 것이고 「미제와 남한당국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북한에서 반정부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것이었다. 박헌영도 1955년 12월 15일, 「간첩·파괴·살인 및 폭행죄」로 사형됐다.

이 숙청을 계기로 「당성검토」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남로계 출신들이 행방불명되었다.

「우리 당은 우리 대열에 잠입하여, 특히 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이봉하여 당을 약화시키려고 기도한 미제의 고봉간첩 도당들과 기타 투항분자들을 처단하고 우리 당의 통일을 철옹성같이 고수하였다」고 김은 주장했으나, 남로계의 숙청은 6.25패전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시켜서 그의 라이벌을 제거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2. 연안파의 숙청

연안파는 그 인물구성이나 관록에 있어서 김일성일파보다는 훨씬 우수·우세하였다. 8.15귀국 이후 김두봉이 지도자로 있던 「독립농맹」의 후신으로 신민당을 창설했다. 그러다가 소련의 압력으로 공산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이 합당은 어느 정도의 모순을 내포한 이질세력의 정략적 결혼에 불과했고, 따라서 양파간의 암투는 계속됐다. 그러면서도 남로당계의 숙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정적 대결이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국내파 숙청과 소련파 숙청도 그리하나 이 연안파 숙청도 몇 번
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안파 숙청의 첫 희생자는 무정이었다.

1) 무정의 숙청

1950년 12월 4일 만포진 별오리에서 열린 북괴 노동당중앙위 제
2차 전체 회의에서 김일성은 제1단계 패전의 주요책임을 무정에게
전가했다.

무정은 후퇴시에 「인민군」장병들을 불법 총살했을 뿐 아니라
평양방위사령관으로 있을 때,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의 명령에 불복
했다는 것이다.

무정은 중공군 포병출신으로 「판로군」의 사단장까지 역임한 명
성을 떨친 장군이었다. 귀국후 「북조선공산당」의 제2비서직을
맡았으며, 괴뢰군 포병사령관으로 있기도 했다.

6.25 때 제2군단장으로 출전했고 나중에 평양방위사령관으로 됐
다가 만주로 후퇴해서는 패잔병으로 제6군단을 개편했다.

김일성은 평소 무정의 명망과 그에게 불복하는 때도 있기 때
문에 경계심과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무정중심으로 군대내
의 연안파가 단결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김은 그의 절대 권력이 구축·확장에 장애가 된다고 느꼈던 무정
을 패전의 책임을 지워 제거해 버렸다.

2) 박일우와 방호산의 숙청

무정 다음으로 출당·숙청된 연안파 인물은 박일우와 방호산이었
다. 1955년 4월, 「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이 양자는 종파
주의자로 규탄됐다.

박일우는 연안파의 중진으로 광로군에서는 중견지휘관을 역임한바 있다. 귀국후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내무국장과 피뢰「내각」의 내무상이 되어 북괴치안책임을 맡아 왔다. 전시엔 북괴·중공연합 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의 지위에 올랐으며 중공의 신임이 두터웠다.

박은 김일성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남로계와도 친밀히 지냈던 것이다. 박 숙청의 기회를 엿봤으나 중공군사령관 팽덕회등의 비호때문에 뜻을 못이루던 김은 휴전후인 55년 4월에 그를 반당종파반역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했다.

방호산도 이때 함께 숙청되었다. 박일우와 함께 「종파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도 연안파의 중진장군이었고, 귀국후엔 피뢰군 조직에 큰 역할을 했으며, 피뢰군 6사단장과 군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방은 전쟁중의 전투공로로 받았던 「이중영웅」칭호를 박탈당하고 출당처분을 받았는데 체포될 기미가 보이자 중공으로 도피했다.

3) 연안파의 대규모 숙청

김일성의 폭주와 독재에 반감을 품어 오던 연안파는 1956년 6월, 김일성의 소련 및 농구방문기간을 반김운동준비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김두봉(북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최창익(부수상)·윤공흡(상업상) 등이었고, 서휘(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와 이필규(건설공업국장)였다. 여기에 장병산(제4군단장)이 가담했다. 그리고 이미 거세되어 불만을 품고 있던 소련파인 박창욱과 추소대신 이상조도 합세하여 반김공작은

착실히 진행됐다.

56년 8월 14일에 돌아 온 김은 동구방문에 대한 귀환보고를 위해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반김파는 김일성의 독재와 실정을 맹렬히 비난했으나, 성과치 못하고 윤공흠·서휘·이필규등은 중공으로 도피했다. 그리고 이들은 출당 당했다.

이 사태를 수습키 위해 소련에선 미코얀 제 1부수상이, 중공서는 팽덕회 부총리가 급파되어 숙의끝에 연안파의 출당처분이 철회됐다.

그러나 김은 연안파의 숙청을 위해 연안파의 빈절자 김창만을 이용하여 반김운동음모계획을 적발했다.

김은 최봉건을 소련으로 밀파하여 이 사건가담자 숙청에 대해 소련의 양해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창익·박창욱과 양계·강선민·김민산·고봉기등이 체포됐고, 김두봉은 2년후에 순안북장의 노무자로 유배당했다.

박헌영·이승엽일파의 쿠데타계획은 김일성이 날조한 죄명이었으나 연안파의 김일성거세계획은 사실인듯 하다.

이렇게 하여 남로계 다음으로 연안파는 완전 숙청되고 말았다.

3. 소련파의 숙청

소련파는 주로 소련 2세들로 구성되고 소련공산당조직에서 생활한 자들이다. 이들은, 당조직능력이나 공산주의 이론에서 김일성보다 월등 우세하였다. 이 소련파의 지도자는 허가이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숙청당했다.

1) 허가이의 숙청

허는 김승화·남일·박창규·태소수·기석복등과 함께 소련파의 거두이며, 김일성의 가장 두려워 한 적수였다. 귀국후 「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조직부장과 「조선노동당」의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 후 부수상과 당비서를 지냈는데 박헌영과는 당 부위원장을 함께 지낼 때부터 친숙하였다 한다.

허가이를 제거하기 위해 김은 소련파인 박창욱을 이용했다. 1951년 11월 북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허가이를 규탄했다.

「당세의 확대에 있어서 섹트주의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직으로부터 추방되고 무상직만 갖고 있다가 남노계 숙청 당시, 허가 박헌영일파의 구성분자라고 불리게 되자 현충자살을 하고 말았다.

2) 박창욱의 거세와 숙청

박은 소련파 출신의 거물이었으나 김일성에게 포섭되어 같은 소련파인 허가이 숙청과 그리고 남노계 숙청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 공로로 당부위원장과 부수상을 겸하게 됐다.

그러나 그 역시 숙청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소련 2세인 그는 김의 의심을 샀고, 「김일성 혁명전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김의 불신을 샀다.

김은 「박창욱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실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박은 1956년 9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당지도급에서 추방됐다

가, 1956년 여름 연안파가 추봉이 된 반김운동에 가담했다 하여 숙청당하고 말았다.

허가이·박창욱을 비롯한 소련파는 남일 정도를 예외로 모두 추방·숙청됐다.

4. 직계파의 숙청

남로파·소련파·연안파를 숙청하고 다시 연안파와 친근하던 중국 망명출신의 김원봉의 「인민공화당」을 숙청한 김일성은 남북인사들을 또 숙청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반대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나자 이번엔 김일성 직계파안에 반목·대립이 생겨났다.

소위 군사파와 갑산파의 대립이 그것인데, 이 양파는 1962년 12월 북괴 제4기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완전히 분열됐다.

새로운 전쟁준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김은 군사파를 두둔하였으며, 김의 지지를 얻은 군사파는 갑산지하공작파에 공격의 파살을 겨누었다.

1967년 4월 김일성과 군사파는 중앙당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갑산파를 공격했다. 이효순·박금철·임춘주·고혁·김도만·허석선 등이 공격을 받았으며, 김일성을 비롯하여 최봉달·김일·김창봉·박성철·허봉학·석산·김영주·오진우 등이 공격을 피부었다.

공격의 요점은 갑산파들이 제4기5차전원회의의 결정인 군사력강화정책을 불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대남공작에 실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천리마노선」을 교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망동들

부렸다는 점등이다.

뿐만 아니라 박금철은 그의 여비서를, 이효순은 자기집 식모를 강간한 도덕적 부패분자라는 것이고, 또 박은 일제때 서대문 형무소를 제탈로 걸어나온 변질자라는 목적이었다.

이들은 모두 당 중앙위원에서 「철퇴」(撤職)되었고 박과 이는 협동농장으로 추방당했다.

감산파(분관파)의 숙청·몰락과 군사파(항일빨지산파)의 실권장악으로 북괴의 정치부대엔 두가지 특징적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하나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정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노선이 강화·추진되는 동시에 대남침투·과괴공작이 적극화한 점이다.

二. 정치이념의 변천과정과 대남전략동향

I.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사상」

어떤 주의와 사상도 그것은 「사상의 여과기」로서의 역사적·사회적 제조건에 적응하여 형성 발전하는 법이다.

8.15 이후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북한에 수입·이식된 맑스·레닌주의의 특수형태로서의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소비에트화와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 확립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해 왔다.

소위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북한의 고유하고도 특수한 역사적 현실에 적응·발전시켰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권능은 「영명한 아버지 수령 김일성 원수님」 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화운동이 일어났고, 동구 위성국가에선 엔베르·호자와 울부리트를 제외한 모든 스탈린주의자들이 몰락하였는데도, 유독 김일성만은 여전히 불가오류의 존재로 굳림하고 있다. 김일성의 이상화와 신격화를 위한 광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북괴의 모든 어용학자들은 김일성의 족보를 허위 날조하는 한편 그의 항일투쟁업적을 조작·선전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사」, 「조선민족해방투쟁사」, 「조선노동투쟁사」를 날조하여 역사를 그 중심으로 의곡 기술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 군사과는 감산과를 숙청한 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당지시를 내렸다.
그중 몇가지를 들면

첫째, 총비서동지(김일성)의 사상으로 당을 통일·단결시켜야 한다.

둘째, 당내에는 총비서동지의 사상이외의 다른 사상은 없다. 왜냐하면 총비서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건설은 오직 총비서동지의 영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 당원들은 총비서동지의 의사대로 단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곧 당의 사상체계이다.

셋째,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러 저러한 좌우경적 조류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총비서동지의 사상과는 인연이 없다. 그러므로 총비서동지의 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총비서동지의 노선에 충실한 의무만이 있다 등등이다.

이는 조지·오웰이 「동북농장」에서 풍자·희화한 독재자 픽·나 폴레옹 바로 그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가 「사유하는대로」 사유하고 「행동하는대로」 행동하고, 「숨쉬는대로」 숨쉬며 살아가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것이 맑스·레닌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북괴의 국정 이데올로기는 맑스·레닌주의요, 말을 바꾸면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다. 그러나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조선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적절하게 통일시킨 「조선적 맑

스·레닌주의」는 아니다.

북괴의 정치이념은 맑스·레닌주의로 분장한 김일성 독재주의요, 김일성사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사상이 북괴의 모든 정책과 전략·전술의 기저로 되는 것이며 북괴의 대남전략도 여기에서 추출·파생된다 하겠다.

II. 북괴의 평화통일공세

북한의 소비에트화와 함께 추구·수행된 것이 다름아닌 「북조선 민주기지」 노선이다. 남북분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민주기지」 노선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다시 이를 공산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의 기지로서의 성격을 단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1948년 3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민주주의적 역량들을 우리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이승만도당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혁명투쟁으로 결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그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부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을 「조선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는 「혁명적 민주기지」, 공산주의혁명의 기지로 삼았으니, 「미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에 반대」하여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그의 임무요, 이를 거점으로 하여 「미제강점하」의 남한에다 혁명의 불길을 점화하고 이를 해방·통일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라 할 것이다.

김은 「우리가 경제건설을 잘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북반부를 일대낙원으로 만들 때에는 북반부를 동경하고 남조선 반동통치계도

를 반대하여 일어서는 조선인민들의 혁명기세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이름의 공산주의 통일에다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김의 이 「민주기지」 이론은 「조국의 평화통일」론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김은 민주기지이론에 입각하여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는데 이 이론은 그의 절대권 확립에 기여하고, 당내지배권을 방어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평화통일공세의 이니시아티브를 그가 잡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도 준 것이다.

1. 남북정치협상의 진말

두차례에 걸쳐 개최됐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통일의 가망성이 희박해진 시기에 북괴가 제의한 것이 바로 이 남북정치협상이다.

1948년 3월 25일 평양에서 소집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선」 중앙위원회 제 26 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및 사회단체에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서에 근거하여 남북언석회의를 4월 14일 평양에서 열자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북로당의 김두봉과 김일성, 주민당의 최용건, 청우당의 김달현, 적업총동맹의 강진건, 여성동맹의 박정애, 그리고 민청, 기독교연맹, 불교연합 대표자들의 연명으로 발표된 이 호소문은 남한 정계에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남한의 우익계 인사들도 이에 호응, 그 해 4월 19일에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민주주의적 애국정당 및 사회단체」는 북한이 15, 남한이 28이었다.

이 남북연석회의에는 남한에선 김구, 김규식, 허헌, 조소앙등 저명 인사도 참석했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이른바 「4김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남북연석회의는 「남북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자의 결정서 골자는 (1)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 (2) 남북의 민주주의적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가 애국적 총역량을 집결, 「5.10 단선」을 파탄시킬 것, (3) 남북한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한국인 자신의 손으로 조선정부를 수립시키자는 소련정부의 제안을 실현할 것 등이었다.

그리고 공동성명서는 철두철미 미소양군의 즉시 철수와 「5.10 단선반대투쟁」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남북연석회의는 북로당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북로당이 노린 바는 남한의 민족적 정치역량을 약화시키고 민족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그들이 장악하는 일이었다.

남한의 민족적·민주주의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의적 행동과 순심에서 나온 통일의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김일성 일당의 전략에 말려든 셈이었다.

소박한 애국심과 우국충정에서 나온 사심없는 통일론도 공산주의

가들에게만 다만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남북연석회의가 남겨 놓은 경험적 교훈이라 하겠다.

2. 중립국감시하의 남북총선거론

남북협상과 남로계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5.10 선거는 실시됐고 이 때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그러자 그들은 평화통일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6.25의 무력남침을 감행했다. 그러나 6.25는 무력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성을 입증해 주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다시 통일전략을 바꾸어 중립국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제기했다.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북파의상남일은 통일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출했다.

(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 「진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초위에서 「조선에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 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것.

(ii) 「조선국회」의 자유총선거를 준비실시하며 「남북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적 접근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최고 인민회의」와 대한민국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 「남북조선대표」로써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 위원회는 「남북조선」의 가장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대표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2) 6개월 기간내에 「전조선지역」으로 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할 것을 인정할 것.

(3) 극동에서의 평화유지에 가장 관심을 가진 당해국들은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을 단일독립민주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과업의 급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조건을 지어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등이다.

이 제안에서 분제되는 것은 「남북국회」 대표로 「전국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련의 승인 아래 합법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정부와 소련의 위성국으로 세워진 괴뢰정권과를 대등한 위치에 놓으려는 책략이라 하겠다.

이 당시 한국에선 북진통일론 이외의 어떤 통일이론도 타부로 돼 있었다. 그런데 제네바회의에서는 변영태대표가 국련감시하에 대한민국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실시를 골자로 한 19개 조항의 통일안을 제출, 그들에 맞섰다.

북괴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닌 이상, 통일을 위한 총선거등을 할 의도는 없었다.

그들의 속셈은 이런 국제회담을 그들의 선전목적에 위해 이용하여 그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민주기지」를 시급히 복구시키며, 「결정적 시기」를 포착, 이용하는데 있었다.

3. 남북연방제통일론

북괴의 대남전략과 평화통일공세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물론 그들은 4.19 이전에도 평화통일공세를 계속해왔던 것이다.

1956년 5월 31일에는 「무력사용의 상호금지」를 제안하면서 동년 8월 31일까지 북괴병력 8만감축을 발표했다.

또 1956년 7월 3일엔 남북인사로 구성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이름으로 「남북정부·국회 또는 정당·사회단체 및 애국적 인사들로서 평화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재홍, 조소항, 오하영, 원세훈, 엄항섭등의 남북인사로 구성된 이 조직체는 「조국통일선전」의 자매단체이며, 북괴의 매남선전에 이용되어 왔다.

4.19이후 남한에서 활발히 전개된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자기들의 매남전략에 교묘히 이용하려 하면서 북괴는 적극적인 통일공세를 폈다.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아래와 같은 6개항목의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1)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인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

(2) 아직 남한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선거를 받아드릴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 남북한의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3) 만일 상기 제안등을 남한정권당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실업계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할 것.

(4) 남북한에서 미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남북한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

(5) 남북한 문화사절의 왕래와 과학·문화·예술·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것.

(6) 이상의 제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대표들이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회의할 것을 남한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적 인사에게 제의한다는 것이었다.

남북연방안은 남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두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킨채 그들 양진영에서 각각 대표를 선출하여 중앙정부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물론 없었다.

4.19 이전에 북괴는 대남공작전술에서는 혁명퇴조기전술인 남한내 지하당조직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과정 및 민주당시대의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민중들의 소박하고도 활발한 통일운동을 교묘히 이용하여 「혁명상승기전술」을 사용하려 하였다.

북괴의 이와 같은 통일공세는 5.16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벽에 부딪쳤으며, 대남전략에 차질과 전환을 초래케 했다.

고. 북괴의 「자주노선」과 전 시정권채제

1. 「자주노선」의 의미

1966년 10월 5일에 열렸던 「당대표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채택했다.

(1) 현정세와 「조선노동당」의 과업

(2)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3) 월남 문제에 관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 청명채택.

그리고 김일성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를 말했으며, 중공소이념분쟁, 월맹지원문제등에 언급했다 한다.

이보다 앞서 그해 8월 12일, 북괴는 당기판지 「노동신문」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사실을 발표, 중공과 소련을 함께 비난하고 북괴는 어느 편향에도 들지 않으며 자기노선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한바 있다.

김일성은 이 사실에서 언급했던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국제문제들에서 원칙을 버리고 미제와 타협하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소련을 은근히 비난했는가 하면, 「미제를 반대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라고 하여 중공을 은근히 공격했다.

북괴는 이리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원칙을 들어 「자주노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괴의 정치와 사상과 경제와 국방등에 진정한 의미에서
의 「자주」나 「주체」나 「자립」이나 「자원」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소련의 위성국가였고 소련 일변도노선을 견지해 오던 북괴는, 큐바
사태를 계기로 친중공노선으로 전환했었다.

그 동안 북괴는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민했으며, 중·소
의 중간에서 친소, 친중공, 불편부당 사이를 몇번이나 시계추처럼 왔다 갔
다 했다.

북괴가 과거엔 큐바사태를 구실삼아 친중공노선으로 전환했으나, 이
번의 노선전환의 구실로는 월맹지원문제를 들었던 것이다.

「자주노선」은 따져보면 북괴의 노선전환의 구실과 명분에 불과하
다.

북괴가 자주노선을 선언하게 된 데는 두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
겠다.

그 첫째는 「다극화시대」에 있어서의 약소공산주의국의 난처한
입장이다.

북괴의 리처드·로웰탈의 말처럼 「국제공산주의가 유일한 권위의 중심이나
교리의 중심과 같은 전세계적 기구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시
대에 처한 약소국가가 자기 이익 옹호를 위해 취한 고차원의 기회
주의적 「도회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자주노선」을 선언한 월맹도 유고를 유일한 예외로 하고, 다른
어떤 공산주의국가도 정년으로 공격한 적이 없으며, 2대 공산주의국
가인 중·소의 어느 원도 최종적으로 편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호지영 등은 「반제통일전선」의 형성을 가장 적극 강조했던 것이다.

불짜는 북괴가 그들의 경제건설과 군사력상화 및 안보문제 때문에 「극동의 알바니아」로 자처한 친중공노선을 포기치 않을 수 없었다.

북괴는 차질을 가져온 7개년계획을 수정 성취시키고, 남한의 강력 한 「반공, 군사정권」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 그들의 대 남침투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선 소련의 효과적인 경제적 군사적 원조 가 필요했다.

이미 1965년 5월말에는 소련·북괴간에 새로운 군원협정이 체결 됐고, 1966년 6월 20일엔 장기경제원조협정과 그리고 기술원조협정 도 체결됐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괴는 소련편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됐고 그 구실 로 「자주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반제·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면에서는 중공에 가까우나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련편에 기울어진 것이다.

월맹의 경우도 북괴의 경우와 흡사하다. 그러나 월맹이나 북괴의 이 「자주노선」은 「공산권안의 프랑스」라고 불리우는 루마니아의 「독자노선」과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공산·민주진영 간의 「자주노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산주의 양대국가간의 「자주노선」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2. 전시정권체제와 대남 전략변경

「자주노선」선언후 북괴정권은 군장성등용으로 전시정권체제로 개편 되었고, 대남적화공작이 적극화 했다.

66년 10월 5일에서 12일 사이에 열린 「북동당 제4기 14차 중앙위원회」는 두가지 중요한 결정을 가져왔다.

(1) 김일성이, 종래의 평화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호전성」의 방법채택을 주장했다. 이는 「전무장·후통일」론이며, 무력 통일론이다.

그리고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인민군대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의 소위 「4대군사노선」을 지지했다.

(2) 6명으로 구성되는 「정치위원상임위원회」를 개편했는데, 그중, 4명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김광협이고, 과거에 군대배경이 없던 문관파의 이효순, 박금철이 정치적으로 거세되었다.

그후 67년 12월 16일에는 소위 「제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장성들이 민족보위, 내무, 교육, 건설상등에 임명되어 전시정권체제를 감추었다.

그리고 대남적화공작을 골자로 한 소위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지원하며, 혁명대사건을 주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끈끈히 준비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괴의 대남공작전술은 바뀌어졌다. 68년 1월 21일의 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 이전의 대남공작은, 고정간첩을 대량남파시켜 간첩활동과 지하당 조직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대남공작은 이제 두개로 나뉘어 졌다.

(i) 지하고성간첩공작은 중앙당연락국과 「민족보위성정찰국」의

283 군부대가 담당하고 (ii) 내남과 괴·암살 공격은 동 경찰국의 124
군부대가 담당하게 했다 한다.

이에 따라 대남공작의 책임자인 대남사업총국장도 이효순 대신에
김일성의 심복인 허봉학대장이 임명됐다가 다시 김중린으로 된 것이
다.

북괴는 「자주노선」선언 후엔 군사력강화·전쟁준비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70년대의 적화통일의 목표달성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종래의 평화통일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력통일론을 공공
연히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三. 북괴 대남 전략의 평가 및 한국의 대응책

1. 대남 전략변경의 원인과 특질

북괴의 「자주노선」선언과 이에 따른 대남전략공작전술의 변경·전환과, 남한에 있어서의 5.16을 계기로 한국통일론과 통일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북괴는 평화통일론의 포기, 무력적화통일론의 공언, 이에 따른 대남유격대의 대량남파등으로 종전의 그들의 평화통일론(물론 선전효과를 노린 가면적인 것이긴 했으나)에 송지부를 적고, 대화의 통로를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5.16 이후 반공체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통일논의에 대한 통제 및 규제의 강화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일체의 통일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확실히 한국통일논의와 운동은 크게 후퇴했고, 평화통일론은 사실상 그 성립조건을 상실하여 이제 통일에 대한 전망은 혼미·암담할 뿐이라 하겠다.

6.25 남침으로 적화통일을 기도했다가 민족적 참극만 빚었을 뿐, 무력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고 그리하여 평화통일공세를 펴오던 북괴가 다시 무력통일노선으로 전환·계렬라부대를 남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 원인과 배경중 중요한 몇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한의 정국과 사회질서를 교란·혼란시키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정세는 민정이양, 6.3 사태 등에 따른 혼란을 극복, 상대적으로 안정을 기하게 되었으며, 외국의 경제원조, 차관도입 등으로 한국경제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정국안정과 경제건설은 북괴에게는 큰 위협으로 될 수 밖에 없으니, 초조해진 김일성은 마침내 무력통일론을 내세우고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그들의 불안과 위협의 요인을 방해, 제거하려 하게 되었다.

2. 한국과 미국의 전쟁결의와 그 군사력을 탐색 실험하고, 한미간의 정책차이를 노출시켜 한·미간을 이간시키고자 한 것.

3. 이와 아울러 월남전선에 대한 제2전선 형성으로 한국의 월남지원 및 파병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며, 나아가 미국내의 반전운동을 고무하여 미국의 아세아정책의 변화에 작용하려고 한 것.

4. 소련 및 중공의 관심을 한반도에 집중시켜 김일성노선의 의의와 존재를 선전하고, 그들로부터 군사원조와 방어보장을 받으려고 한 것.

5. 소위 「계급적 적」과 「미제」와 그 「알잡이」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위기의식과 긴장감 조성으로 대중적 불만을 해소, 억압하며, 내핍생활 강요와 강제노동 및 전부훈련으로 주민을 물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6. 남한의 민심교란과 계릴라 근거지 구축 및 「결정적 시기」에 봉기할 지하전략당조직을 기도·획책한 것.

7. 당내 이데올로기 투쟁과 김일성의 일인독재체제 확립·유지에 이를 결부·이용한 것. 이는 자유당정권 때의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 통일론에 대한 국론통일 및 반공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탄압과 일인독재 확립에 이용된 일이 있는 것과 비슷한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북괴는 계속 도발행위를 감행했다.

휴전선상의 무단한 도발행위에 이어 68년 1월엔 무장공비 남파로 청와대 습격을 기도했고, 그달 23일엔 원산 앞바다에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으며, 다시 11월엔 울진·삼척에 다수의 게릴라를 투입했다.

그리고 69년 4월 15일에는 미정보탐지기 KC121기를 격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북괴의 대남전략변경과 이에 따른 무장간첩투입 및 교란행위는 그들의 목적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했다.

이해득실면에서 따진다면 북괴는 잃은 것이 많았고, 반면 우리는 얻은 것이 많았다.

한국은 북괴의 잇다른 도발행위에 대비, 방위태세를 정비·강화하게 됐다.

68년 2월 7일 하동역두에서의 박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한국측은 방위태세 확립에 주력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의 하동발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종래의 유엔군 중심 국방태세에서 자주적 국방태세로의 전환, ② 향토예비군 250만명의 무장화, ③ 무기생산공장의 연내건설 등이다.

한국군은 전면전예의 대비태세를 확립, 장비현대화등을 내용으로 한 국군의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간첩대책본부 설치, 기동

타격대 편성등으로 북괴의 음격전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력도 강화되었으며, 국군장비 개선을 위한 부랴운각서의 이행 및 항공무장을 위한 군원증가도 실현을 보게 됐다.

북괴의 전쟁도발 및 침투·파괴행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문제됐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집단방위체제상의 제문제점이 보완되기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북괴의 호전성·침략성이 폭로되자 그들의 위신은 실추되었으며, 한국민의 그들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심은 높아졌고, 반공의식은 더욱 공고해졌다. 6.25 남침이 그들에 대한 종래의 동조자마저 이반·상실한 역효과를 초래하고 적화통일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듯이, 최근의 북괴의 대남전략도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II. 우리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중대한 몇가지 문제점

2차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된 국가는 독일과 월남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3개국이다. 그런데 이 세나라 가운데서 한국과 월남은 소히러 공산집단에서 통일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는 감을 주었고, 다만 독일에서만 자유서독이 동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서독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고 슈마하는 「동독의 행정은 위성 체제에 불과하며 이 체제안에는 오직 하나의 의사만이, 즉 중심적 두목이요 지배자인 소련의 의사만이 존재한다. 동독으로부터 나오

는 소위 독일인의 통일이니시아티브란 소련의 자극을 위한 외교 정책의 일부이다。」라고 하여 통독에서의 동독의 이니시아티브를 부인했던 것이다.

한국통일 논의와 운동에 있어서도 이 말은 적용된다. 지금까지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괴가 주도권을 장악한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통한문제에 있어서 이니시아티브를 잡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곳은 그래도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한국입에 틀림 없다.

그런데 통독문제에 있어서 서독이 주도권을 취하는 것은 동독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이 자신은 정치적 안정에서 오는 것이고 정치적 안정은 경제부흥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도 통한문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야 하며 「공산주의 공포증」이나 패배의식을 추호도 가짐이 없이 자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상적 제 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첫째로 북괴의 전쟁준비정책과 대남유격전술에 대비,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여하한 도발도 효과적으로 저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둘째로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간의 싸움은 사실상 어느 체제가 더 잘 국민대중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며, 복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통일논의도 「선통일·후건설」이 아니라 어디

짜지나 「선전설·후통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빈부의 양극화·극대화를 방지·지양해야 하며 사회복지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배꾼은 자는 성내는 자」가 되고 나아가 반체제적으로 되기 쉬운 법이다.

스위지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붕괴에 대한 맑스의 예언이 적중하지 않는 것은 1, 2차대전에 의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극복을 맑스가 예견치 못한 때문이라 하고 있으나, 사실 맑스의 예언이 맞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자본주의자체의 자기수정·자기시정적 노력이다.

뉴·딜이후의 자본주의의 자기수정적 노력이 자본주의의 몰락, 붕괴가 아니라 번영, 발전을 계속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대중의 동질성과 동일체감의 유지는 경제적 발전과 이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분배원칙에서만 가능하며, 나아가 이는 통일운동에서의 통일·단결성 및 민주역량의 강대성과 직결되게 된다.

다음 세제는 민주주의의 우위성을 견지하는 문제다. 공산독재주의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더 우수하고 보람있는 사회체제인가를 보여야 한다.

국방과 건설이라는 과제 때문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가 제약, 퇴색·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대공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삼아 내세울 가치가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네제는 민족주체성과 민족주의적 입장의 견지다. 북괴가 「자주노선」을 선언했으나 북괴가 민족주의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민족공산주의」의 입장에 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외세의존·외세주종이 아니라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대의명분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서독의 경우,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독교민주당을 반대하고 사회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아테나워수상이 사실상 통일을 단념하고 그 대신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등의 구교국가와 서독을 합쳐 중세기의 소위 「신성로마제국」을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시키려고 한다는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나치게 대일본접근정책을 쓰고 그리하여 「제2의 나당동맹(羅唐同盟)」의 인상을 풍긴다면 인텔리·학생층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하기 쉽다.

역사적·지리적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이북은 대체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친근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남은 전통적으로 친일·친미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하겠다.

베트남인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불신감이 월맹지도부의 대공공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같이, 한국남북주민들의 그들의 인접국에 대한 호·불호·친밀·경원의 감정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할는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끝으로 다섯째로 이데올로기논쟁과 투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공산주의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비판적 지

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 대학에서 공산주의 비판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반공은 과학적인 이론적 토양위에서 행동화되고 생활화되는 반공
운동으로 승화·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북괴의 격증하는 도발과 도전에 대한 대응
책이라 하겠으며,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탈취·장
악하여 민주주의제도가 신장·승리하는 방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자세와 대책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성취하는 일은 결코 용이
한 일이 아니다.

이 어렵고도 막대한 국가적·민족적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민
적적 예지와 창의성과 노력이 동원돼야 하는 소이기도 바로 이 때
문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Black, Gyril E. and Thornton, Tomas P., Communism and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1964.
- Honey, Patrich J., Communism in North Vietna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achusetts, 1963.
- Hook, Sidney, Marx and the Marxists, D. Van Nostrand Co., Inc., Princeton, 1955.
- Lowenthal, Richard, World Communism,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66.
- Meyer, S. Frank, The Moulding of Communist,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1961.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The Origins of the Korean Communist," Journal of Asian Studies, Feb., 1961.
- The China Quarterly, No 14, April-June, 1963.
- Treadgold, Donald W., Soviet and Chinese Communism,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1967
- 김상협, 모택동사상, 지문각, 1964.
- 김창순, 북한 15년, 지문각, 1961.

-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상)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동운, 북한통치기구,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4
- 박인후, 북한독재 정치의 실증적 연구, 아세아 문제연구소
 북한요람, 공보부, 1968
- 북한총감,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 양호민, 「북한의 소비트화」, 논단, 제2권 제1호, 7월, 1966.
 ———,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7
 ———, 공산주의의 이론과 현실비판전서, 제1권, 내외문화사, 1963.
- 유 현, 북한 20년, 대한방공교육원, 1966.
- 이동준, 환상과 현실, 동방통신사, 1961.
- 한재덕, 공산주의 이론과 비판전서, 제5권, 내외문화사, 1965.
- 현대사와 공산주의 (제1집), 공보부, 1968.